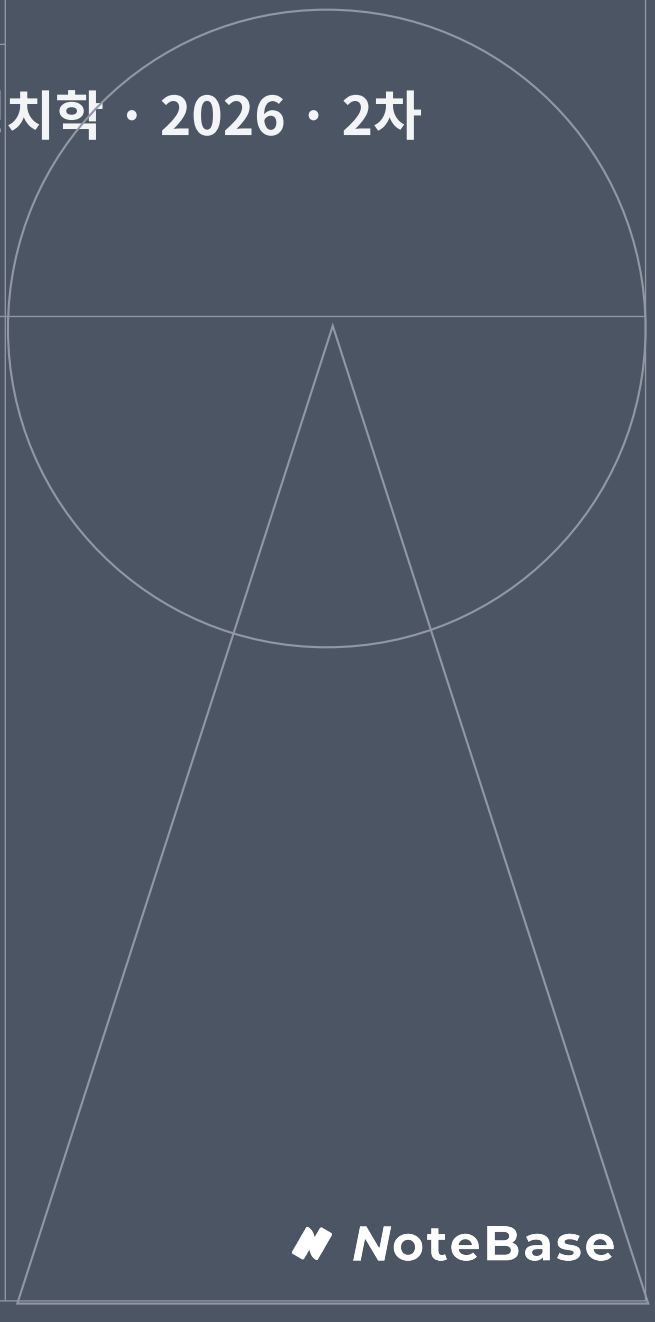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6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6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6 · 2차

문 1. 저비스(Jervis)의 안보딜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격이 우세하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안보딜레마가 가장 약화된다.

② 방어가 우세하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 세계에서 안보딜레마가 가장 심화된다.

③ 방어가 우세하더라도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안보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④ 공격이 우세한 경우에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구별 가능 여부가 안보딜레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방어가 우세하면 상대의 공격을 막기는 쉬워지지만, **공격용·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없으면** 상대의 군비 증강이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인지 공격 준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어 우세만으로 안보딜레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안보딜레마는 자국의 안전을 높이려는 군비 증강이 상대국에는 위협이 되어, 서로 대응하다가 불안과 군비 경쟁이 커지는 상황이다. 저비스는 공격과 방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결합하여 이를 설명한다.

① X: 공격이 우세하고 무기 구별이 불가능하면 안보딜레마가 **가장 심화된다**. 공격으로 이익을 얻기 쉬워 먼저 공격하려는 유인이 크고, 방어를 위한 무장도 상대에게 공격 준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약화된다'를 '가장 심화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방어가 우세하고 무기 구별이 가능하면 **가장 안정적인 세계**가 된다. 공격을 막기 쉽고, 방어용 무기를 갖추어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안전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안보딜레마가 해소될 수 있다. '가장 심화된다'는 설명과 반대이다.

③ O: 방어가 우세하면 공격 성공이 어려워져 안보딜레마가 완화되지만, **무기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남는다**. 상대의 방어 목적 무장도 공격 능력의 강화로 받아들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안보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④ X: 공격이 우세해도 **무기 구별 가능 여부에 따라 안보딜레마가 달라진다**. 구별이 불가능하면 방어 목적의 무장까지 위협이 되지만, 구별이 가능하면 방어적 군비를 선택해 상대에게 방어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후자의 세계에서는 안보딜레마가 해소될 수 있으나, 공격 자체가 유리하므로 침략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타난 '멜로스 대화(Melian Dialogue)'에 대한 고전적 현실주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아테네의 팽창 정책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부재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② 아테네의 행동은 힘을 가진 강자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라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근거한 귀결이었다.

③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전쟁은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 존재하면 막을 수 있다.

④ 아테네와 멜로스 간의 갈등은 민주주의와 과두제라는 상이한 국내 정치체제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고전적 현실주의는 아테네의 지배 요구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과 연결한다. 멜로스 대화에서 아테네가 힘이 있으면 지배하려는 성향을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에게도 적용한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고전적 현실주의는 아테네의 팽창을 **권력 추구의 본성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국가 간 상호의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팽창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상호의존이 갈등을 억제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설명과 더 가깝다.

② O: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권력 투쟁을 인간의 이기심과 지배 욕구에 연결한다. 멜로스 대화에서 아테네는 힘이 닿는 곳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보편적이며, 멜로스도 같은 힘을 가지면 자신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테네의 행동을 **강자의 특수한 성격이 아닌 보편적인 권력 추구 성향**의 발현으로 해석한다.

③ X: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 규범의 존재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멜로스가 정의를 내세워도 아테네의 우월한 힘과 지배 의도를 제약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규범이 실제로 강대국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는 힘의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을 함께 살펴야 한다.

④ X: 고전적 현실주의의 설명에서 갈등의 핵심은 **국내 정치체제의 차이가 아니라 힘의 불균형과 국가이익의 충돌**이다. 아테네의 지배 요구와 멜로스의 독립 유지가 충돌한 것이며, 권력 추구는 민주주의나 과두제 중 어느 한 체제에만 나타나는 성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1930⨯1940년대에 일어난 다음 사건들을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얄타회담
(나) 독일의 폴란드 침공
(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라) 뮌헨협정

① (나) → (다) → (라) → (가)
② (나) → (라) → (다) → (가)
③ (라) → (나) → (다) → (가)
④ (라) → (다) → (나) → (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뮌헨협정은 1938년에 체결되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의 사건이다. 얄타회담은 독일의 패전이 가까워진 **1945년 2월**에 열려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회담이다.

올바른 순서

(라) → (나) → (다) → (가)

(라) 뮌헨협정: **1938년 9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기는 데 합의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요구를 수용해 전쟁을 피하려 했던 유화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의 폴란드 침공보다 앞선다.

(나) 독일의 폴란드 침공: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뮌헨협정 이듬해이며, 일본의 진주만 공습보다 이르다.

(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된 뒤의 사건이다.

(가) 얄타회담: **1945년 2월**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만나 독일 처리 등 전후 질서 문제를 논의했다.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보다 앞선 전쟁 말기의 회담이므로,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그람시(Gramsci)의 이론을 국제관계에 적용한 콕스(Cox)의 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헤게모니 국가는 자국의 특수한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동의(consent)를 창출한다.

② 헤게모니는 군사력과 같은 강제력(coercion)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지배 상태를 의미한다.

③ 헤게모니는 국가 간 세력 관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되므로 국제제도와 무관하게 형성된다.

④ 헤게모니 개념은 민주주의 제도가 전쟁을 쉽게 개시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을 설명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콕스의 헤게모니는 지배국과 지배적 사회세력의 특수한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제시하여 동의**를 얻는 질서이다. 다른 국가와 사회집단이 그 질서를 정당하고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콕스는 그람시의 동의에 기초한 지도력 개념을 국제관계에 적용한다. 헤게모니 국가는 자국과 지배적 사회세력에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으로 제시하여, 다른 국가와 사회집단이 이를 수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특수한 이익을 보편화하여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헤게모니의 핵심이다.

② X: 헤게모니를 '강제력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지배로 한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콕스의 헤게모니는 **강제력과 동의의 결합**에 기초하며, 특히 동의를 통한 지도력이 전면에 나타난다. 군사력 등 물질적 힘은 질서를 뒷받침하지만, 그 힘만으로 복종시키는 상태와 헤게모니는 구별된다.

③ X: 콕스는 헤게모니를 국가 간 세력 분포만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질적 능력뿐 아니라 관념과 제도가 서로 작용하여 세계질서를 형성한다. 국제제도는 지배적 가치와 규칙을 보편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확산하여 **헤게모니를 유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제제도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④ X: 민주주의 제도가 지도자의 전쟁 개시를 제약한다는 설명은 **민주평화론의 제도적 설명**에 해당한다. 의회·선거·권력분립 등에 따른 견제가 지도자의 무력 사용 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이다. 콕스의 헤게모니 개념은 이러한 국내 제도의 전쟁 억제 효과가 아니라, 동의와 물질적 힘 및 제도를 통해 특정한 세계질서가 형성·유지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5. 웬트(Wendt)가 제시한 무정부 상태(anarchy)의 문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홉스적 문화

② 루소적 문화

③ 로크적 문화

④ 칸트적 문화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웬트는 국가들이 서로를 **적·경쟁자·친구**로 인식하는 관계에 따라 무정부 상태의 문화를 홉스적·로크적·칸트적 문화로 구분한다. **루소적 문화는 이 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홉스적 문화는 상대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관계이다. 상대국의 생존을 인정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 간 폭력에 제약이 약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중심이 된다.

② X: 루소적 문화는 웬트가 제시한 무정부 상태의 문화 유형이 아니다. 웬트의 분류는 **홉스적·로크적·칸트적 문화**이며, 각각 적대·경쟁·우호 관계에 대응한다.

③ O: 로크적 문화는 상대국을 **적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는 관계이다. 국가 간 경쟁이나 전쟁은 가능하지만 상대국의 주권과 생존권을 인정하므로, 상대국 자체를 제거하려는 홉스적 문화와 구별된다.

④ O: 칸트적 문화는 상대국을 **친구**로 인식하는 관계이다. 국가들은 서로의 분쟁을 전쟁이나 전쟁 위협 없이 해결하고, 어느 한 국가가 제3국의 위협을 받으면 함께 대응한다. 이처럼 상호 비폭력과 상호 원조가 우호 관계의 핵심 규범이다.

NoteBase

문 6. 기후변화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다자 협상이었다.

② 2009년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온실가스 배출, 삼림 파괴, 검증 절차, 빈국의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이르렀다.

③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정답 2번

①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개발 문제를 논의한 다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②

코펜하겐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였다. 일부 국가들이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당사국총회는 이를 정식 채택하지 못하고, 합의문에 '유의한다'는 결정만 채택하였다.

③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등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제한·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목표 이행을 위해 **부속서 나에 포함된 당사국 사이의 배출량거래**를 허용하되, 국내 감축조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1997. 12. 11. 채택) 제3조 제1항
부속서 1 당사자는 2008~2012년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 이상 감축하기 위해, 각자의 수량적 공약에 따른 배출허용량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1997. 12. 11. 채택) 제17조
부속서 나 당사자는 감축공약 이행을 위해 배출량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래는 국내 이행조치의 보조수단이어야 한다. 거래의 원칙·방식·규칙·지침은 당사자총회가 정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1997. 12. 11. 채택) 부속서 나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 대비 수량적 배출 제한·감축 공약을 당사자별 백분율로 정한다(호주 108%, 오스트리아 92% 등).

NoteBase

④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회의의 권고를 바탕으로 같은 해 유엔총회가 설립을 결의하였다.

NoteBase

문 7.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질 문제(substantive matter)에 대해서 5대 상임이사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찬성 표결에 인구 최소 요건을 정한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투표권이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④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1국 1표 원칙을 따른다.

정답 4번

①

WTO 일반이사회는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이 원칙**이며, 회의에 참석한 어느 회원국이든 공식적으로 반대하면 컨센서스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 5개국에만 거부권을 부여하는 구조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1항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며, 회의에 참석한 어느 회원국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야 컨센서스가 성립한다.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컨센서스가 성립하지 않으면 표결하며,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투표과반수에 따른다.

②

WTO 일반이사회는 **인구에 따른 가중투표가 아니라 회원국별 1표 원칙**을 따른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투표과반수로 결정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1항
일반이사회는 컨센서스를 우선하며,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한다. 각 회원국은 1표를 가지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투표과반수로 결정한다. 구주공동체는 WTO 회원인 소속 회원국 수만큼 투표권을 가지되, 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합계 투표수는 공동체 회원국 수를 넘을 수 없다. 분쟁해결기구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는 별도 결정 규정이 적용된다.

③

WTO 일반이사회의 투표권은 **경제력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않고 회원국별 1표가 원칙**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경제력을 기준으로 더 많은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전제가 틀렸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1항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구주공동체가 투표할 때에는 WTO 회원국인 공동체 회원국 수만큼 투표권을 가지며, 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합계 투표수는 공동체 회원국 수를 초과할 수 없다.

NoteBase

④

WTO 일반이사회에서 각 회원국은 **국가 규모나 경제력과 관계없이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의사결정은 컨센서스를 우선하며, 표결할 때에는 1국 1표 원칙을 적용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1항
컨센서스를 우선하며,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한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각 회원국은 1표를 갖는다. 다만 구주공동체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WTO 회원인 소속 회원국 수만큼의 표를 가지며, 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총투표수는 소속 회원국 수를 넘을 수 없다.

NoteBase

문 8.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이론 중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수립을 통합의 결과로 보나,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을 부정한다.

② 기능주의는 경제 협력이 정치 통합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나, 신기능주의는 통합의 성패가 정치 통합보다 경제 통합에 달려 있다고 본다.

③ 기능주의는 기술적,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나, 신기능주의는 통합과정에서 정치 엘리트의 역할과 파급 효과(spillover)를 강조한다.

④ 기능주의는 국내 이익집단보다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나,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보다 국내 이익집단 간 협력을 강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능주의는 **기술적·비정치적 협력의 점진적 확대**를 중시한다. 신기능주의는 여기에 **정치 엘리트의 역할과 파급 효과**를 강조하여, 한 분야의 통합이 다른 분야의 통합과 정치적 결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초국가적 제도가 국가 간 이해를 조정하고 추가 통합을 유도하는 **능동적 행위자**라고 본다. 기능주의가 공동의 기능적 필요에 맞추어 조직을 발전시키려는 데 비해, 신기능주의는 이미 형성된 초국가적 제도가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강조한다.

② X: 신기능주의는 통합의 성패가 정치 통합보다 경제 통합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확대뿐 아니라 **정치 엘리트·이익집단의 이해와 행동**, 초국가적 제도의 활동을 함께 분석한다. 기능주의가 비정치적 협력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려 한다면, 신기능주의는 경제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정치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중시한다.

③ O: 기능주의는 보건·교통 등 기술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는 협력이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신기능주의는 이러한 기능적 연계와 함께 정치 엘리트의 선택과 활동을 강조한다. **파급 효과(spillover)**란 한 분야의 통합이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과 추가 통합을 필요로 하게 하는 작용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와 이익집단이 초국가적 수준에서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초국가적 제도가 이를 조정하면서 통합이 확대될 수 있다.

④ X: 기능주의의 초점은 정부 간 외교적 협상 자체보다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는 **전문적·기능적 협력**에 있다. 신기능주의는 국내 이익집단을 중요한 행위자로 보지만, 이들 간의 협력을 초국가적 제도와 대립시키지 않는다. 이익집단이 초국가적 제도에 요구와 기대를 돌리고 그 제도가 통합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함께 강조한다.

NoteBase

문 9.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노동기구(ILO)
② 식량농업기구(FAO)
③ 국제통화기금(IMF)
④ 국제형사재판소(ICC)

정답 4번

①

국제노동기구(ILO)는 UN과의 관계협정에서 **UN 전문기구로 인정**된다.

국제연합과 국제노동기구 간의 관계협정 제1조
국제연합은 국제노동기구를 그 기본문서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전문기구로 인정한다.

②

식량농업기구(FAO)는 UN과의 관계협정에서 **UN 전문기구로 인정**된다.

국제연합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관계협정 제1조
UN은 FAO를 전문기구로 인정하며, FAO가 그 기본문서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③

국제통화기금(IMF)은 **독립된 국제기구이면서 UN 전문기구**이다. 조직의 독립성이 전문기구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과 국제통화기금 간의 관계협정 제1조 제2항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UN 헌장 제57조의 의미에서 경제 및 관련 분야에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전문기구이다. 그 국제적 책임의 성격과 설립협정의 규정에 따라 독립된 국제기구이며,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국제형사재판소(ICC)는 UN과 협력하는 **독립된 상설 사법기관**이다. UN 체계에서는 **전문기구가 아닌 관련기구**로 분류된다.

국제연합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관계협정 제2조 제1항
국제연합은 국제형사재판소를 독립된 상설 사법기관으로 인정한다. 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법인격과 그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NoteBase

문 10.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규정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 안보: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
ㄴ. 공동체 안보: 인종적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
ㄷ. 식량 안보: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경제적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ㄹ. 환경 안보: 단기적·장기적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도록 보호하는 것은 **'정치 안보'**이다. ㄱ은 이를 '사회 안보'라고 잘못 연결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1994년 UNDP의 인간안보는 경제·식량·건강·환경·개인·공동체·정치 안보의 일곱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문제는 각 영역의 명칭과 보호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ㄱ. X: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도록 보호하는 영역은 **정치 안보**이다. 국가의 정치적 억압이나 인권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 안보'는 1994년 UNDP가 제시한 일곱 영역의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O: 공동체 안보는 민족·종교 등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따라서 **인종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공동체 안보에 해당한다.

ㄷ. O: 식량 안보는 모든 사람이 항상 기본적인 식량에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식량이 공급되어 있어도 이를 구입할 소득이 없다면 식량 안보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ㄹ. O: 환경 안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기적·장기적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된다.

인간안보의 영역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보기는 ㄴ·ㄷ·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의 전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1973)은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 외교정책 수립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② 미국 헌법은 의회에는 전쟁선포권을, 대통령에게는 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③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의회가 선포하였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수행하였다.

④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대를 교전 지역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군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베트남전쟁 등을 계기로 대통령의 독자적인 참전 결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을 견제하고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②

미국 연방헌법은 **전쟁선포권을 의회에,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전쟁에 관한 권한을 분담시킨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대통령은 미국 육군과 해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각 주의 민병대가 미국의 실제 복무에 소집된 경우에는 그 민병대의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하다.

③

2026년 2월 28일 이란 공격은 **의회의 선전포고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개시한 군사작전**이었다.

NoteBase

④

대통령은 미군을 교전 또는 교전이 명백히 임박한 상황에 투입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선전포고 없이 이러한 상황에 투입했다면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전쟁권한법 제3조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미군을 교전 또는 정황상 교전 관여가 명백히 임박한 상황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투입 후에는 미군이 더 이상 교전에 관여하지 않거나 해당 상황에서 철수할 때까지 의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미국 전쟁권한법 제4조 (a)항 제1호
선전포고 없이 미군을 교전 또는 정황상 교전 관여가 명백히 임박한 상황에 투입한 경우, 대통령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에는 투입이 필요했던 사정, 투입의 헌법상·법률상 권한 근거, 교전 또는 관여의 예상 범위와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NoteBase

문 12. 역대 한국 정부와 그 대외정책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정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② 이명박 정부 - 비핵·개방·3000

③ 박근혜 정부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④ 문재인 정부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다.

선지별 해설

① X: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다.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구상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평화번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했다.

② O: '비핵·개방·3000'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경제협력·지원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③ O: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지역협력 구상이다. 재난관리·환경·원자력 안전 등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했다.

④ O: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평화의 축**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번영의 축**으로 삼았다. 동북아의 평화협력과 함께 북방·남방 지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려는 구상이다.

NoteBase

문 13.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미국의 외교관 조지 케넌은 1946년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국무부로 보낸 긴 전문(Long Telegram)에서 소련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가) 전략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구상을 1947년 (나)을 통해 공식적인 대외정책으로 천명하였다.

① (가): 격퇴(rollback), (나): 루즈벨트 독트린

② (가): 연루(engagement), (나): 애치슨 라인

③ (가): 유화(appeasement), (나): 마셜 플랜

④ (가): 봉쇄(containment), (나): 트루먼 독트린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케넌이 구상한 **봉쇄**는 소련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다. 이를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천명한 것이 1947년의 **트루먼 독트린**이다.

빈칸별 해설

(가) 봉쇄(containment): 케넌은 1946년 모스크바에서 보낸 긴 전문에서 소련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소련의 팽창에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봉쇄는 **소련의 영향력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이다. 이미 소련의 지배나 영향 아래 있는 지역을 되찾으려는 격퇴(rollback)와는 목표가 다르다.

(나)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12일 의회 연설에서 무장한 소수 세력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예속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지원 요청이 구체적인 계기였다. 이는 위협받는 국가를 지원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겠다는 정책 선언**으로, 봉쇄 구상이 미국의 공식 대외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의 봉쇄와 (나)의 트루먼 독트린을 연결한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14.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과 규범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낸다.
ㄴ. 국제사회는 공통의 제도를 기반으로 존재하는데, 그러한 제도로서 외교, 전쟁, 강대국 정치 등이 있다.
ㄷ. 대표적인 학자로는 와이트(Wight), 불(Bull), 버터필드(Butterfield) 등이 있다.
ㄹ. 국제사회는 소속 국가들 간의 공동의 이익과 제도를 갖고 있고, 원하는 국가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영국학파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들이 **공통의 규범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형성한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공통 규칙의 수용과 **다른 국가들의 인정**이 필요하므로,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무정부 상태는 국가 위에 군림하는 중앙정부가 없다는 뜻이며, 질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학파는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인식하고 공통 규칙을 따르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ㄴ. O: 영국학파에서 제도는 공식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국가들이 공유하는 **지속적인 관행과 규칙**도 포함한다. 불은 세력균형, 국제법, 외교, 전쟁, 강대국의 질서 관리를 국제사회의 주요 제도로 제시했다. 외교는 의사소통과 협상을, 강대국의 질서 관리는 주요 강대국들의 질서 유지 역할을 뜻한다. 전쟁도 무제한적 폭력 일반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칙 아래 권리의 집행이나 세력균형 유지 등에 이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로 다룬다.

ㄷ. O: 와이트, 불, 버터필드는 영국학파의 형성과 발전을 이끈 대표적 학자들이다. 이들은 국제정치의 역사와 규범을 연구하며 국가들이 공유하는 규칙과 제도를 통한 질서 형성에 주목했다. 특히 불은 **'무정부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의 부재와 국제사회의 질서가 양립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ㄹ. X: 국제사회가 공동의 이익과 제도를 갖는다는 부분은 맞지만, 원하는 국가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리다. 국제사회는 어느 국가의 일방적인 가입 의사만으로 구성원 자격이 성립하는 모임이 아니다. **공통 규칙과 제도의 수용 및 다른 구성국들의 인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하는 국가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공통 규칙과 제도를 수용하고 다른 구성국들로부터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중동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중동전쟁(1948□49)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건국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변 아랍국들의 공세로 발발했으며, 아랍국들이 승리하여 팔레스타인의 많은 지역을 확보하였다.

② 제2차 중동전쟁(1956)은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계기로 발발했으며,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개입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이들 국가가 철수하면서,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되찾고 아랍 민족주의를 추진했다.

③ 제3차 중동전쟁(1967)은 6일 전쟁이라고도 하며,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등을 점령하여 단기간에 영토를 대폭 확장하였다.

④ 제4차 중동전쟁(1973)은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며, 6일 전쟁으로 상실한 영토 회복을 노린 아랍국들이 이스라엘과 일진일퇴를 벌이다가 휴전이 성립되었고, 이들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1차 중동전쟁에서는 아랍국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통제 지역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①의 '아랍국들이 승리하여'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 직후 주변 아랍국들이 공격한 것은 맞지만,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1949년 휴전 때 유엔 분할안에서 유대국가에 배정된 범위를 넘어 통제 지역을 확대하였다. 요르단이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이집트가 가자지구를 통제하게 된 사실을 아랍국 전체의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O: 1956년 나세르가 영국·프랑스 자본의 수에즈 운하 회사를 국유화하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영국·프랑스가 개입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경제적 압력, 소련의 위협과 유엔의 개입으로 침공국들이 철수하였다. 이집트는 운하 통제권을 유지했으며, 외세에 맞선 나세르의 위상이 높아져 **아랍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다.

③ O: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은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어져 '6일 전쟁'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통제하던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시리아의 골란고원, 요르단이 통제하던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여기서 영토 확장은 **군사적 점령·통제 지역의 확대**를 뜻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합법적 영유권을 모두 취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O: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는 1967년에 빼앗긴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을 되찾고자 이스라엘의 욤 키푸르 명절에 공격하였다. 초기에는 아랍 측이 진격했으나 이스라엘이 반격하였고, 유엔과 미국·소련의 개입 속에 휴전이 성립하였다. 전쟁 중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등에 **석유 금수와 감산**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석유 공급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제1차 오일쇼크로 이어졌다.

NoteBase

문 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할 가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한다.

②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바탕으로 1994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공식화되었다.

③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형성의 단계를 제시한다.

④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두 통일방안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었다.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하여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철학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와 민주는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뿐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할 가치이다.

② X: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먼저이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그 뒤를 잇는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이를 계승·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지는 두 방안의 계승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O: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를 제시한다. 화해협력 단계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기구를 운영하여 공존을 제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체제를 통합하여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

④ O: 통일의 기본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이다. 자주는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 및 남북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통일, 평화는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에 따른 통일, 민주는 민족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른 통일을 뜻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조약은?

유럽연합(EU)에 완전한 법인격이 부여되어 국제협정 체결 및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럽이사회의 기존 순환 의장제를 대신하여 30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이 도입되었으며, 각료 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는 회원국 수뿐만 아니라 회원국 인구 비중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의 가중다수결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회원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조약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① 니스조약
② 마스트리흐트조약
③ 리스본조약
④ 암스테르담조약

정답 3번

공통 해설

리스본조약은 **EU의 법인격 명시, 30개월 임기의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직 신설, 회원국 수와 인구 비중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다수결 도입, 회원국의 공식 탈퇴 절차 명문화**를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조약 제15조 제5항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임기 2년 6개월의 의장을 선출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16조 제4항
2014년 11월 1일부터 일반적인 가중다수결은 이사회 구성원의 55% 이상이면서 적어도 15개 회원국이고,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 저지소수는 최소 4개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유럽연합조약 제47조
유럽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

유럽연합조약 제50조 제2항
탈퇴를 결정한 회원국은 유럽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한다. EU는 해당 국가와 탈퇴 조건에 관한 협정을 교섭하고 체결하며,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중다수결로 협정을 체결한다.

NoteBase

문 18.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 천연자원을 선진국에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②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경제질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결집한 G77과 비동맹운동 등에 기원을 두고 있다.

③ 북반구의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개발도상국을 총칭하며,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④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증대, 공급망의 다변화 등에 따라 글로벌 스윙국가(global swing state)로 부상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국가별·시기별 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신흥국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로벌 사우스에는 에너지·광물 등 핵심 천연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지만, 이를 경제적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연결할 수는 없다. 주요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소비·교역에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표현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다만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매년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글로벌 사우스는 식민지배의 경험과 국제경제질서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개발도상국들의 연대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G77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경제적 이익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조직이며, 비동맹운동은 냉전기 강대국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추구했다. 두 흐름은 **개발도상국의 자율성과 공동 발언권 강화**라는 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형성 배경과 연결된다.

③ O: 글로벌 사우스는 대체로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의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며,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노스와 대비된다. 다만 남북의 구분은 **위도만이 아니라 발전 수준과 국제질서에서의 위치**를 반영한다. 북반구의 인도도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며, 남반구의 호주·뉴질랜드는 통상 글로벌 노스로 분류된다.

④ O: 글로벌 스윙국가는 강대국 사이에서 사안별 협력 상대를 선택하면서 국제질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뜻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이 다변화되면 자원·시장·생산 거점을 가진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커진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특정 진영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협상력과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 전체가 하나의 진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NoteBase

문 19. 브랜즈와 베클리(Brands and Beckley)의 '피크 차이나(Peak China)'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앨리슨(Allison)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피크 차이나'를 잘 설명하고 있다.
ㄴ. 부상하는 도전국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했음을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ㄷ.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인구, 자원, 국제환경 등의 요인들이 약화함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쇠퇴를 예측하고 있다.
ㄹ. 중국이 국력 상승의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패권국에 대한 선제공격보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피크 차이나'는 중국의 성장 동력이 약해져 국력이 정점에 이르며, **쇠퇴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대외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장 둔화를 평화의 보장으로 보지 않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 무력 사용을 선택할 위험에 주목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앨리슨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부상하는 도전국이 기존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하면서 패권국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양국 간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설명한다. 반면 브랜즈와 베클리는 도전국의 지속적인 상승보다 **상승이 멈추고 쇠퇴가 예상될 때 생기는 조급함**에 주목한다. 따라서 '피크 차이나'의 핵심을 설명하려면 패권국의 두려움뿐 아니라 중국 스스로 느끼는 미래 전망의 악화를 보아야 한다.

ㄴ. O: 두 저자는 독일과 일본을 부상하던 강대국이 미래의 불리한 세력관계를 우려해 전쟁을 선택한 사례로 해석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은 러시아의 국력 증대와 적대 세력의 포위를 우려했고, 1941년 일본은 미국의 군비 확장과 석유 금수로 자신의 전략적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현재의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동기**이다. 선제공격을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장래의 쇠퇴를 막으려는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ㄷ. O: 브랜즈와 베클리는 중국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했던 조건들이 약화하고 있다고 본다.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던 인구 구조는 고령화로 불리해지고, 자원 부족은 성장 비용을 높이며, 해외 시장과 기술에 접근하기 좋았던 국제환경도 다른 국가들의 견제와 무역 장벽으로 악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의 기반이 약해진다는 판단**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쇠퇴 전망을 도출한다.

ㄹ. X: '피크 차이나'는 국력의 정점에 도달한 중국이 평화적으로 새로운 질서의 정당성을 창출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니다. 이미 확보한 힘은 크지만 미래의 전망은 나빠진다고 느끼면, 지도부는 기다릴수록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저자는 중국이 **쇠퇴 전에 이익을 확보하려고 무력 사용 등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단정과는 구별된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므로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 핵보유국이 참여하여 조인하였다.

②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③ 핵비보유국에게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에 핵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④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답 1번

①

프랑스와 중국은 **1968년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1992년에 가입**하였다.

②

핵확산 방지 의무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모든 당사국의 원자력 연구·생산·사용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인정한다.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4조 제1항
이 조약은 모든 당사국이 차별 없이, 제1조와 제2조에 부합하게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생산·사용을 발전시킬 불가양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은 **평화적 핵활동의 핵물질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 안전조치를 수락하고, 이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 제1항
비핵무기 당사국은 평화적 핵이용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약상 의무의 이행을 검증하는 IAEA 안전조치를 수락해야 한다. 안전조치는 자국 영토·관할권 안 또는 그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평화적 핵활동의 원료물질과 특수핵분열성물질에 적용된다.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 제4항
비핵무기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은 조약 최초 발효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이후 비준서·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는 늦어도 기탁일까지 개시하며, 협정은 협상 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해야 한다.

NoteBase

④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협상을 성실하게 추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6조
모든 당사국은 조속한 핵군비경쟁 중지와 핵군축에 관한 효과적 조치 및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아래의 전반적·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을 추구할 의무를 진다.

NoteBase

문 21.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강화조약(1905)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의 러시아령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인에게 허용한다.

②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과 그 부속도서를 일본에 할양한다.

③ 러시아는 전쟁의 실비를 일본에 지불한다.

④ 러시아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랴오둥 반도 조차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정답 3번

①

러시아는 일본해·오호츠크해·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에서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을 일본과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존 러시아인과 외국인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11조
러시아는 일본해·오호츠크해·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에서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본과 합의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이 이미 보유한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러시아는 **북위 50도를 경계로 사할린 남부와 그 부근 도서를 일본에 할양**하기로 하였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9조
러시아는 사할린 남부와 그 인접 도서를 일본에 영구히 완전한 주권으로 할양하고, 할양 영토의 경계를 북위 50도로 정한다.

③

러시아가 일본의 전쟁 비용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러시아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양국이 지출한 **전쟁포로의 보호·생활 비용의 차액**이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13조
양국은 포로의 포획·항복일부터 사망·송환일까지 보호·생활에 직접 지출한 비용의 확인된 계산서를 서로 제시한다. 러시아는 계산서를 교환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이 실제 지출한 금액과 러시아가 실제 지출한 금액의 차액을 일본에 지급한다.

NoteBase

④

러시아는 **청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랴오둥반도의 뤼순·다롄과 그 부근 영토·영해의 **조차권 및 관련 권리를 일본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5조
러시아는 중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뤼순·다롄과 인접 영토·영해의 조차권 및 관련 권리·특권·이권과 조차지 내 공공시설·재산을 일본에 양도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중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로 약정한다.

NoteBase

문 22. 국제연합(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난민 보호

② 적정 가격의 청정에너지

③ 성평등

④ 기아 종식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난민 보호는 UN의 중요한 활동이지만, **SDGs의 독립된 17개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난민과 관련된 과제를 다루는 것과 '난민 보호'라는 별도 목표를 두는 것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난민 보호'는 **17개 SDGs 중 독립된 목표명이 아니다**. 난민 보호가 UN의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SDGs의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적정 가격의 청정에너지'는 **목표 7**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이다.

③ O: '성평등'은 **목표 5**에 해당한다.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④ O: '기아 종식'은 **목표 2**에 해당한다. 굶주림을 끝내는 것과 함께 식량안보 확보, 영양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을 추구한다.

NoteBase

문 23. 동아시아 지역협의체를 출범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EAS
(나) ASEAN
(다) ASEAN+3
(라) ARF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다) → (라) → (가)
④ (나) → (라) → (다) → (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RF는 **1994년**에 출범하여 1997년에 시작된 ASEAN+3보다 앞선다. EAS는 **2005년**에 첫 정상회의를 열어 네 협의체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하였다.

올바른 순서

(나) → (라) → (다) → (가)

(나)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을 통해 설립되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의 5개국이 창설하였으며, 제시된 협의체 중 출범 시기가 가장 이르다.

(라)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으로, **1994년 7월 25일** 방콕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신뢰 구축과 예방외교를 추진하는 협의체로, ASEAN 설립 이후이자 ASEAN+3 출범 이전에 시작되었다.

(다) ASEAN+3: ASEAN과 한국·중국·일본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1999년 제도화되었지만, 출범 시기는 협력 과정이 시작된 1997년이므로 ARF보다 뒤에 놓인다.

(가) EAS: 동아시아정상회의로, **200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출범 당시 ASEAN+3 참여국에 인도·호주·뉴질랜드가 더해진 협의체로, 1997년에 시작된 ASEAN+3보다 늦다.

NoteBase

문 24. 베르사유 조약(1919)에서 연합국들이 독일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독일은 알자스-로렌지역(Alsace-Lorraine)을 프랑스에 반환한다.
ㄴ. 독일의 라인란트(Rheinland) 지역을 비무장화 한다.
ㄷ. 전쟁의 책임이 있는 독일의 배상금 총액을 총 1,500억 금마르크로 결정한다.
ㄹ. 독일은 자르(Saar)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1번

ㄱ

1871년 독일에 할양되었던 **알자스·로렌을 프랑스 주권 아래로 반환**하도록 했다.

베르사유 조약(1919) 제51조
1871년 독일에 할양된 알자스·로렌을 1918년 11월 11일 정전일부터 프랑스 주권 아래로 반환하고, 1871년 이전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 규정을 회복한다.

ㄴ

라인강 좌안과 우안의 강에서 동쪽 50km까지의 구역에서 **요새의 유지·건설과 군대의 주둔·집결, 군사훈련을 금지**했다.

베르사유 조약(1919) 제42조
독일은 라인강 좌안과, 라인강 동쪽 50km에 그은 선의 서쪽에 있는 우안 지역에서 요새를 유지하거나 건설할 수 없다.

베르사유 조약(1919) 제43조
위 구역에서는 상시 또는 일시적인 군대의 주둔·집결,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 및 동원을 위한 모든 상설 시설의 유지가 금지된다.

NoteBase

ㄷ

배상금 총액을 조약에서 확정하지 않고 **배상위원회가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베르사유 조약(1919) 제233조
독일이 배상할 손해액은 배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ㄹ

자르 지역은 **국제연맹 통치 아래 두고 15년 후 주민에게 귀속 의사를 묻도록** 했다. 프랑스에 넘긴 것은 **자르 탄광의 소유권과 독점적 채굴권**이었다.

베르사유 조약(1919) 제45조
독일은 프랑스 북부 탄광 파괴에 대한 보상과 전쟁배상의 일부로, 자르 지역 탄광의 완전한 소유권과 독점적 채굴권을 일체의 채무·부담 없이 프랑스에 양도한다.

베르사유 조약(1919) 제49조
독일은 자르 지역의 통치권을 포기하고 이를 수탁자인 국제연맹에 맡긴다. 조약 발효로부터 15년 후 주민들에게 희망하는 주권 귀속을 묻는다.

NoteBase

문 25. 모겐소(Morgenthau)가 제시한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에 의해 운용된다.

② 정치 영역은 독자성을 가지며 국가 이익 내용 자체는 불변적이다.

③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이다.

④ 국가가 외교정책을 도덕적 동기에 따라 추구하는 것은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국가 이익 내용 자체는 불변적이다'가 잘못되었다. 모겐소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을 보편적인 분석 기준으로 삼았지만, **국가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정치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선지별 해설

① O: 모겐소는 정치가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인간의 권력 추구 성향을 바탕으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며, 바람직한 이상만으로 현실 정치를 이해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② X: 정치 영역이 경제·윤리·종교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분석 영역이라는 부분은 모겐소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내용까지 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것은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이라는 분석 범주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익으로 추구하는지는 시대와 정치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③ O: 모겐소는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기준을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에서 찾았다. 국가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려면 지도자의 개인적 동기나 이념만 살피기보다, 그 정책이 국가의 권력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④ O: 모겐소는 도덕적으로 선한 동기가 바람직한 정치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가가 구체적 상황과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도덕적 명분만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면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도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행동의 결과를 따지는 신중함**을 중시하며, 보편적 도덕 원칙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